‘코로나19’ 이후 중국의 행보와 한중관계

황재호 |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 | jaeho@hufs.ac.kr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내 사망자가 2천명, 확진자가 8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피해가 집중된 후베이성에서의 증가세는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진정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명확한 원인 규명은 이르나 불결한 식생활, 부족한 의료체계, 경직된 중앙집권 정치구조, 억압적 정보통제의 결과란 지적이 많다. 시진핑 주석의 집권 7년 동안 중국은 G2로서의 위상과 국력을 과시해 왔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과 중국의 굴기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시각이 많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Ⅰ. 중국 정부의 대응 평가

첫째, 중국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다.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의 핵심은 정부조직의 거버넌스 현대화였다. 2003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는 발발부터 우이 부총리가 이끄는 대응팀 구성까지 5개월이 걸렸다. 이번엔 리커창 총리 책임의 대응팀 구성까지 2개월이 걸렸다. 정부의 대응 시간이 짧아졌고 대응 격이 높아졌다. 단, 사스 때보다 인명 피해가 몇 배 많은데, 17년 전 사스 때보다 조기 대응능력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는지 지켜봐야 한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의 국가정책의 일관된 전개이다. 국정 이념이자 동력인 ‘시진핑 주석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본질은 인민행복, 국가부강, 민족부흥이다. 이번 사태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대민 약속인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역행하는 것이다. 3월 초 예정되었던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문화대혁명 시기를 제외하고 처음으로 연기되었다. 당장 경제활동의 위축이 예상되는데, 올해 예정된 샤오캉사회(小康社会, 살만한 사회)를 달성할지 지켜봐야 한다.

셋째, 경제・과학기술・국방 분야는 굴기 중이지만 정작 가장 기본 인프라인 보건위생은 허약했다. 종합 국력의 허점이 드러났고, 일대일로와 신형국제관계를 내세운 중국의 외교 굴기도 난관을 만났다. 미중 무역분쟁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고 외부 안보위협은 '핵심이익'으로 대응하면 되지만, 이런 질병 위기는 향후 무역 리스크는 차치하고 중국의 대외 이미지와 행보에 영향을 미친다. 사스에 이어 벌써 두 번째 중국발 전염병 발발은 혐중(嫌中) 정서를 일으킨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위협보다 더 큰 위협으로 인식된다. 문제를 만들기도 했지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지 지켜봐야 한다.

Ⅱ. 중국 정부의 향후 행보

중국정부의 향후 행보는 국내경제, 거버넌스, 외교안보 등 세 분야로 나눠 전망해 볼 수 있다. 먼저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지만, 진정되는대로 본격적인 대규모 내수 진작 조치를 취할 것이다. 올해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으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살만한 사회)'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문제이다.

거버넌스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2월 14일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드러난 단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능력에 대한 도전이며 대응체계 조직을 완비해야 한다", "신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신시대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시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시대,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만족시키는 시대,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 부흥의 꿈을 실현하는 시대, 인류에 큰 공헌을 기여하는 시대를 말한다. 만약 중국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잘 수습해 낸다면 국가 거버넌스의 재정비 속에 국가 발전 로드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신(新)시대가 아니라 신(辛)시대가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흑사병(페스트)이 코로나19 발생 한 달 전인 11월 베이징과 내몽골에서 발생했지만 초기 몇 주 만에 바로 진정되었다. 지방마다 대처능력이 상이하고 무엇보다 관료의 수준 차이가 컸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당 간부의 질적 소양 교육에 역점을 둘 것이다. 의료 대책이 환자 발생을 따라가지 못해 희생이 컸던 만큼, 의료 체계 개선을 포함해 국가 재난 시 인적·물적 자원의 유효한 투입과 효율적 배분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다.

외교안보와 관련, 내부안전을 대외안전보다 우선하는 중국의 '총체국가안전관' 안보정책 성격이 재조정될 것이다. 2천명이라는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웬만한 현대 전쟁 사상자 수보다 많은 수치다. 비전통안보는 그간 국가안보의 영역에 있어서 정치안보, 군사안보, 사회안보, 사이버안보, 핵안보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시되었지만, 이것이 인민안전과 정권안전에 더욱 위협적임을 실감한 만큼 내부안전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될 것이다.

대외적으로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제환경에 재평가가 이뤄지고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다. 2월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된 "중국이 아시아의 진짜 병자(China is the real Sick Man of Asia)"라는 칼럼처럼 이번 사태는 중국의 글로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고 중국의 질적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G2로 부상하면서 책임대국(責任大國)임을 자임해 온 만큼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높은 요구치를 확인하고 이에 부합해야 함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인류운명공동체'도 혼자가 아닌 국제사회와의 공동건설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슬로건 차원을 넘어 방역 등 비전통안보와 관련한 좀 더 실질적 협력을 강조할 것이다.

Ⅲ. 국제사회

국제사회의 대처는 제각기 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 중국과 경제교류가 많은 국가들, 방역에 취약한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 원근에 따라 국경의 전면적 폐쇄, 부분적 제한 등 대응을 달리하고 있다. 대중(對中) 경제적 의존도가 심한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직접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중국과 대립적 관계인 타이완은 중국 교류를 금지함으로써 차이잉원 정권 지지에 활용하고 있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은 지난달 22일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 폐쇄하였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와 지원금을 보냈다.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길' 경고 후에 취했어야 할 조치들을 하지 않을 명분과 시간을 벌 수 있었다.

미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중국 여행을 제한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방역대책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중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립서비스이며, 뮌헨 안보대화에서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중국위협 발언이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월 30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에겐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자 미중 패권경쟁에 호재란 속내를 드러냈다. 미중간 무역합의, 화웨이, 홍콩과 신장위구르 인권법에 이어 코로나19도 대중 공세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들은 후베이성만 부분적으로 입국 금지하였다. 일본은 오히려 마스크 100만개를 지원하고 연예인과 민간인들이 '중국 힘내라' 동영상 응원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 중국에 보낸 지원물자엔 '몸은 멀어도 마음은 함께(山川異域 風月同天)' 구호까지 등장한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누구보다도 강한 일본의 이런 행보는 안정적인 중일관계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중일간 일대일로의 제3국 진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 같은 경제이익, 및 시진핑 주석의 방일을 통한 아베 정권의 대외 지위 상승 등을 기대한다.

IV. 한중관계

한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이 마스크 3백만 개와 다양한 방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20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중국 지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임상치료 경험 공유와 방역 당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중 우호적 입장 견지는 인도주의와 국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일본처럼 신중한 대중 접근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국익은 다음과 같다. 우리 기업의 투자・무역 확대 및 중국 내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향후 중국 의료 인프라 건설 수요도 크다. 관광을 포함한 인적교류가 대폭 촉진될 것이다. 한류도 재진출할 수 있는 기회다. 양국 간 민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좀 더 봉합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힘을 받을 것이다. 한중간 의료정보 교환과 지원은 지난 12월 합의한 '향후 10년 한중일 3국 협력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다. 인도주의적이고 질서정연한 한국외교가 가능하다면 현 정부의 동북아책임공동체 외교의

실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협력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관련 국내 여론이 국민안전·보건위생에서 점차 현 문재인 정부의 대중정책으로 옮겨가고 있다. 초기 동정적 입장이 전염병 공포로 혐중 시노포비아(중국 공포증)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정부가 중국 전역으로 입국금지를 확대하지 않는 것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직접 연계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12월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기는 올해 '상반기'라 했다. 중국인 어법상 상반기란 1월부터 6월까지를 말하며 4월 방일 전 한국에 오기 쉽지 않고 그 이후임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방문을 위해서는 방문국의 우호적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한국은 환영보다 반중 정서가 더 강하다. 오게 하려 해도 오지 말라 해도 그 모든 논란은 상대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우리끼리의 논의에 불과하다.

V. 결론

결론적으로 과도한 국내정치와의 연계도 경계해야겠지만 코로나 이후 한중관계를 대비한 신중한 외교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은 우리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다. 북한 비핵화와 남북대화 재개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이 절대로 중요하다. 때문에 불가피하지만 입국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국내 방역 상황, 중국정부의 조치,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사회의 대응, 주변국들의 행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 방역의 국제정치 속에서 한중 양국의 안정적 관계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외교적 과제가 되었다.